

"노사협력 밀알되어 극복되는 경제위기"

## 국무조정실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8-6897 / 전송 (02)732-9132  
자치행정심의관실 과장 김정년 사무관 이태인

문서번호 국무총괄04200-110

시행일자 '99. 12. 7.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보존기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전결	정태우
조정관	김민준		
심의관	이명준		
과장	김정년		
기안자	이태인		협조
심사자	김달원	심사일	1999.12.7.

제목 정부기관 산하단체 등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와 관련한 지시(국무총리지시 제 29 호) <sup>1999.</sup>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부처의 산하단체에서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정부에 협조요청을 하여온 바

2. 정부 각 부처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국가·공동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학교법인 등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산하기관·단체에 주지시켜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하고

3.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본 지시사항을 지방행정기관에도 즉시 시달하기 바랍니다.

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공문 사본 1부. 끝.

## 국무총리

받는 곳 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전화 (02)503-6877 /전송 (02)507-2633

문서번호 정금 4200-384

시행일자 1999. 11. 26

수 신 국무총리

제 목 정치자금 기부관련 협조요청

---

국정수행에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과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질서확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각계각층의 정치자금법 질서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부처의 산하단체에서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일체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산하단체에 이를 안내하여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계법조문 1부.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붙임]

## 관계법조문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第12條(寄附의 制限)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政治資金을 寄附할 수 없다.

1. 外國人·外國法人 및 外國의 團體, 그러나 大韓民國 國民의 主導下에 있는 外國法人 및 外國團體는 제외한다.
2. 國家·公共團體 또는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株式 또는 持分의 過半數를 所有하는 企業體
4. 言論機關 및 言論團體
5. 勞動團體
6. 學校法人
7. 宗教團體
8. 3事業年度이상 계속하여 缺損을 내고 그 缺損이 補填되지 아니한 企業體